

주간 통일정세

2015-43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연일 ‘교과서 국정화’ 비난공세…이달만 50차례 ‘용단폭격’(10/26, 우리민족끼리; 10/28, 조선중앙통신)
 - 우리민족끼리는 26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의 두 주역’이라는 글에서 “두 주역인 현 집권자와 김무성이 모두 친일파의 후손이고 독재자나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며 “친일파 독재를 미화하려는 ‘역사 쿠데타’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함.
 - 조선중앙통신도 28일 ‘남조선 각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여 투쟁’이란 글을 통해 “남조선에서 유신 독재를 찬미하는 현 당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24일 남조선의 역사학 교수, 연구사들은 서울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460여개 시민사회, 역사단체들로 구성된 ‘교과서 국정화 저지네트워크’도 2차 범국민집회를 가지고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여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라며 국정화 반대 투쟁을 우회적으로 선동함.
- 北매체 “국정화 반대 지령문 보도는 황당무계한 모략”(10/2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9일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는 다 낡아빠진 북통소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내 친북단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북한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지령문을 보냈다’는 일부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황당무계한 모략 나발질”이라고 반박함.
 - 이어 “남한 매체와 보수패당의 논리대로라면 남한 각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사람들이 다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인가”라면서 “우리는 저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때마다 있지도 않은 ‘북 지령설’ 타령으로 우리를 걸고 넘어지며 위기를 수습해 보려는 남한의 보수패당과 극우 보수언론들의 모략적 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통신, 이산가족 상봉 종료 보도(10/26,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종료와 관련해 “북과 남의 상봉자들은 가족, 친척들의 안부를 전하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고 보도한 뒤 “상봉들에서 우리 측 가족, 친척들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온 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체제 우월성을 선전함.
 - 통신은 이어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24일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며 “26일 북과 남의 혈육들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작별하였다”고 덧붙임.
 - 조선중앙방송도 26일 상봉 종료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뜨거운 동포애에 의해 마련됐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상봉은 외세에 의한 분열의 고통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강렬하며, 그 누구도 이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함.

-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서 개최(10/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30일에 보도하면서, “주영길 위원장과 김동만 위원장,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연설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기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겨레의 만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통신은 이 날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장,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중앙위원장, 리명길 전국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중앙위원장, 김정순 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장, 김원수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 등이 참석해 경기를 관람했다고 소개함.

- 국회 외통위, 내달 2일 방북...만월대 궁궐터 방문도(10/30,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는 11월 2일 고려 왕궁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개성 만월대를 방문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국회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9일) 저녁 북한이 입북을 허가했고, 통일부도 방북 승인을 알려왔다”면서 “외통위원을 중심으로 발굴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함.
 -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과 수행원 등 58명이 다음 달 2일 오전 9시 30분께 출경해 개성을 방문한다”고 밝힘.
 - 외통위원들은 만월대 출토유물 전시회가 열리는 개성 고려박물관과 만월대 발굴현장을 찾아 유물 등을 관람하고 발굴작업 진척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주한미군이 일상고 있는 온갖 범죄행위로 하여 수많은 남조선 인민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외세부터 완전히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10.27, 중앙통신)
- 美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부산 입항·韓日 국방장관 회담 등 남한 군부의 ‘韓美日 3자연대 강화’를 주장하며이는 “우리 민족의 백년속적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매국배족 행위”라고 비난(10.28, 평양방송)
- 남한 당국은 ‘남북 고위급 긴급접촉 이후에도 대결악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남조선 당국은 속에 품은 칼을 내놓고 정세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10.31,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해외 노동자 강제노동’ 유엔 회견에 “비방중상”(10/31, 연합뉴스)
 -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대변인은 31일 담화를 내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얼마 전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횡설수설하면서 허튼 나발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함.
 - 그는 또 “최근 일부 나라에서 기자 등 신분으로 위장한 불순분자들이 우리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이스크레한(어둑어둑한) 장소에서 얼굴을 가린 사람을 현지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인 듯이 내세워 ‘한심한 노동환경’에 대해 증언하게 한 사실 등을 놓고 봐도 적대세력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한 인권 모략에 광분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임.
 - 대변인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시기 유엔의 모자를 쓰고 주권국가에 대한 제도 전복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발언을 하고도 사죄 한마디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놀아대 많은 나라의 눈총을 받았던 전적이 있는 자”라고 비난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일본 매체, “北핵연감속로 정지…플루토늄 추출 재처리 가능성”(10/29, 요미우리신문)
 - 요미우리신문은 2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북한이 영변에 있는 5천kW급 핵연감속로의 가동을 10월 중순 정지했다고 밝히며 이에 북한에서 사용 후 연료봉을 꺼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재처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북, 풍계리 핵실험장서 새 굴착공사…핵실험 준비 가능성(10/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정부의 한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장소에서 굴착 공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뉴스는 현재 북한이 굴착 공사를 하는 곳은 과거 2006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핵실험을 했던 곳과 다른 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소식통에 의하면 새로운 갱도 건설 목적이 당장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향후 핵실험 의지를 나타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임.

라. 대미국

- 미국 농구 봉사단체 다음 달 방북...4일간 평양 체류(10/3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보도를 통해 농구선수 출신 미국인 감독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국제감독단’이 11월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에서 4일간 머물며 중·고등학생 대상 합동 훈련으로 농구 기술을 전수할 것이라고 밝힘.
 - 단체의 루크 엘리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이 수천 달러에서 만 달러에 이르는 방북 경비를 자비로 충당한다. 이들의 순수한 뜻을 북한 당국자가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농구를 매개로 한 민간 스포츠 교류가 미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힘.

마. 대중국

- 마이니치신문 “북한 김정은, 내년 상반기 중국 방문 추진”(10/31, 조선중앙통신)
 - 마이니치(毎日)신문이 31일 보도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중국과 북한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북수의 베이징(北京) 외교 관계자가 밝힘.
 - 신문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최근 북한에 다녀간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김 제1위원장에게 전한 시 주석의 친서에 형편이 좋은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함.
 - 애초 중국은 올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김 제1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북한에 두 차례 타진했으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조 내용이나 김 제1위원장이 귀빈석의 어느 자리에 설지 등을 두고 의견을 절충하지 못해 실현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임.

바. 대일본

- 북한 “납치보고서 거의 완성, 일본 수령 거부 시 일방 공개도”(10/31, NHK, 교도통신)
 -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근 평양을 방문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일본 민주당 의원은 북한 당국자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31일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취재진에 밝힘.
 - 아리타 의원은 북한의 여러 고관과 면회를 했으며, 이들로부터 “특별조사 위원회의 보고서가 거의 완성돼 가고 있고 해를 넘길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보고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준비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함.
 - 그는 북한 고관이 “일본 정부가 보고서의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국면이 된다면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 아리타 의원은 일본인 유골 반환을 명목으로 북한이 거액의 경비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화학무기금지기구 사무총장 “북한 화학무기 보유한 듯”(10/29, 타스통신)
 - 타스통신은 29일 아흐메트 위쥬쥬 OPCW 사무총장이 북한과 이집트, 이스라엘, 남수단 등 4개 비회원국의 화학 무기 보유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공개된 정보들에 따르면 북한이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이는 OPCW의 주요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 ‘北인권 최고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안 유엔에 공식 제출(10/30,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이달 초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작성에 돌입, 이날 완성된 결의안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한 ICC 회부 결의안에는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유엔 관행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도 책임자가 누구인지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유엔 소식통들은 올해 결의안에 명시된 ‘최고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서 북한 ILO 가입 권고(10/31, 연합뉴스)

- 연합뉴스 31일 보도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은 3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북한 정부에 대해 ‘ILO의 회원국이 되고, 모든 노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고 유엔 관계자들이 전함.
- 지난해 결의안에서 이 부분은 북한에 대해 “ILO에 대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도로 표현됐으나, 올해는 ‘ILO 가입’을 적시했다고 뉴스는 전함.

■ 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 “북한노동자 5만명 외국서 외화벌이”(10/30, 연합뉴스)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고용돼 북한의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가 현재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유엔에 보고되었으며, 이들은 한달 평균 120~150달러의 임금을 받고 광산, 벌목장, 건설현장, 섬유 및 의류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함.
-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과 최근 유엔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이런 조건에서 일하는 북한의 국외(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알제리와 앙골라, 캄보디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노동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함.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서방의 경제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진 북한 정부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며, 이런 경로로 조성되는 외화 규모가 연간 12억 달러(1조 3천734억 원)~23억 달러(2조 6천323억 원)로 추산된다고 말했으며, 이 같은 평가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던 시민단체들의 보고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뉴스는 전함.

자. 기타 국가

- 北, “세계 개신교 대표들, 평양서 한반도 평화 호소”(10/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개발 협력을 위한 그리스도교 국제연단 운영위원회 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하면서, ‘현 정세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각국 기독교 단체들의 활동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 회의에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세계교회협의회(WCC),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남한의 개신교 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고 전함.
 - 또한 통신은 참가자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적 이행, 한반도의 정세안정을 파괴하고 긴장 격화를 불러오는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군사연습과 무력행사의 중지, 경제제재의 해제”를 촉구했으며,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대결 목적에 도용하고 전단 살포와 적대감을 고취하는 행위의 중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교체, 남북 사이 상호인정과 평화공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를 지지하는 운동을 광범히 벌려 나갈 것”이라 밝혔다고 덧붙였다.

- ‘북미 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이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급선무’라며 ‘미국은 더는 북핵 폐기와 핵대결소동에 매여달릴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데 대한 중대제안을 신중하게 대하고 빠른 시일 안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10.26, 중앙통신)
-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단장: 썸깨우 씨라웁 안전보위상), 10월 26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10.26, 중앙통신)
- 체코 국경철 97돌에 즈음한 사진전시회, 10월 26일 류경일(조선체코친선협회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천리마문화회관에서 개막(10.26, 중앙통신)
- 독일 조선의원단 대표단, 10월 26일 귀국(10.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당국자의 유엔총회에서의 발언(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이미 정리되었음) 관련 ‘일본 반동들의 철면피성과 도덕적 저열성’이라며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일본에 차례질 것은 국제사회의 버림밖에 없다’고 비난(10.27,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병원 오폭 관련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정책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미국이야말로 반인륜 범죄국가, 인류공동의 원수’라고 비난(10.27, 중앙통신)
- 北 인민보안부 대표단과 라오스 안전보위성 대표단, 10월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 진행(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단장: 태형철 고등교육상), 10월 27일 러시아 방문후

귀환(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오키나와현(縣) 당국의 미군기지 이전 승인 철회소식을 전하며 ‘駐日 미군기지 철수는 일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아시아나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고 주장(10.28,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28일 라오스 안전보위성 대표단(단장: 썸깨우 씨라왕 안전보위부 장관)과 담화(10.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아·태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치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를 논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北)와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연일 주장(10.2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러 사진 및 미술전람회 개막식, 10월 29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10.29, 중앙통신·중앙방송)
- 라오스 안전보위성대표단(단장: 썸깨우 씨라왕 안전보위상), 10월 29일 평양 출발(10.29,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조선신보사대표단(단장: 박일 사장), 10월 29일 로동신문 창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도착(10.29, 중앙통신·중앙방송)
- 이란 노동자의 집 대표단(단장: 알리레자 마흐줍 총서기), 10월 29일 평양 도착(10.29, 중앙통신·평양방송)
- 중국민정부 대표단(단장: 리립국 부장), 10월 29일 귀국(10.29, 중앙통신·평양방송)
- ‘제국주의자들의 민주주의 타령에는 반드시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이 뒤따른다’며 ‘제국주의자들의 서방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현실’이라고 주장(10.30,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美의 ‘정전협정→평화협정 체결’은 “현시기 모든 문제해결의 관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미국의 정책전환’ 촉구(10.31,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백두산 발전소 일꾼들과 기념촬영(10/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보도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3일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에 이바지한 일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관련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고 소개함.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 행사 전인 4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이 날 사진 촬영에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영호 내각 사무장, 리중국 기계공업상, 김용광 금속공업상,

강종관 육해운상, 장혁 철도상이 참석함.

- 이어 통신은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이 “영광의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오직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정의 자욱을 아로새겨온 조선 노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앞으로도 우리 당을 경제강국 건설의 빛나는 성과로 받들어 가자”고 하며 일꾼들을 독려했다고 전함.

■ 김정은, “과학기술 발전이 ‘강성국가’ 승패 좌우”(10/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보도를 통해 집권 이후 ‘과학기술강국’을 강조해 온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둘러보고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정책이 응축되고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건축예술의 극치, 상징으로 되는 과학기술전당이 건설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黨 제1비서는 현지시찰 뒤 “과학기술 발전은 강성국가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라며 “이 땅 위에 우리 인민의 모든 꿈이 실현된 강성국가를 세우자면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번 시찰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양건·오수용 노동당 비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건축 브레인’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했으며 김 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함께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생산량 2배 성과’ 메기양식장 시찰(10/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대식으로 새로 지어진 평양의 메기 양식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 메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시찰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오수용 노동당 비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수행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난 시기 한 해 생산량이 900여t밖에 안 되던 공장에서 올해 1천800여t의 메기를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다”며 “요즘은 가는 곳마다 자랑스러운 노동당 시대의 창조물을 보게 돼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함.
- 그러면서 “메기 양어의 본보기, 표준 공장으로 전변(변화)된 것만큼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며 연간 메기 생산 2천여 t 달성, 생산원가 절감, 메기 양식기술 보급 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공식 행사

- 김정은 체제 첫 당대회...1980년 10월 이후 처음(10/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보도하며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 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해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주체105(2016)년 5월 초에 소집할 것”이라고 전함.
 - 당 중앙위 정치국은 결정서에서 “오늘 우리 앞에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혁명 임무가 나르고 있다”고 당대회 개최 이유를 소개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 내년 당대회 준비독려...“혁명 최전성기로 빛내자”(10/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자 신문 4면 전면에 게재한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눈부신 비약의 속도, 전설같은 영웅신화를 창조하며 당 중앙을 결사옹위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함.
 - 신문은 이번 당 대회가 ‘강성국가 건설 역사의 분수령’이자 ‘주체혁명 위업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을 틀어쥐고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투쟁 목표가 높고 과업이 방대할수록 우리가 제일 믿는 것은 인민대중의 사상의 힘”이라며 농축수산, 과학기술, 기초공업, 체육, 예술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하자고 독려함..

- 최룡해 노동당 비서도 31일 노동신문 5면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일 역사적인 대회’라는 글에서 “노동당 제7차 대회는 백두에서 개최된 주체혁명 위업 계승의 확고 부동성을 힘있게 과시하는 역사적인 대회합”이라며 개최 의의를 강조함.

■ 북한 노동신문 “언론인, 김정은 시대 사상적 전위 돼야”(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1면 사설에서 “우리 출판 보도물은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기 위한 혁명의 무기”라며 “모든 언론인은 새로운 신문, 보도, 방송, 출판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 출판보도물은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제국주의자의 추악한 정체를 발가놓는 대적언론전을 벌여왔다”며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독소로부터 정치사상적 풍모와 생활양식을 지키는 전초병이 된 것이 언론인”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다른 글에서는 “당 역사와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불멸의 이정표가 될 노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붓대포의 위력으로 천만군민을 당의 사상관철전으로 불러일으켜야할 언론인의 심장이 세차게 뛴다”고 지적함.
- 노동신문 3면 논설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창건 기념일 연설에서 강조한 ‘인민’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혁명의 전도와 사회주의 흥망성쇠는 새 세대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다”고 힘주어 말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 26일 재러시아동포 정일심에게 90회 생일상과 선물 전달(10.26,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 「삼국통일 문제를 다시 검토할 데 대하여」 발표 55주년 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10월 28일 진행 및 관계부문 일꾼·과학·교육·민족유산보호부문 연구사 등 참가(10.28, 중앙통신·중앙방송)

- ‘노동당 제7차 대회 소집(2016, 5월초)’ 관련 ‘全民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결기’ 주문 및 ‘김정은을 수반으로 한 黨 두리에 철통단결’ 강조(10.31, 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김정은, 수산물 수출 금지 명령...“군인들 먹여라”(10/27,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7일 북한 소식통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일반 주민들과 군부대에 생선 공급을 늘리겠다고 수산자원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린 사실을 보도함.
 - 소식통은 “고급 어족을 비롯한 수산자원 수출을 전면 중단 할 데 대한 원수님(김정은) 방침이 최근 하달됐다”면서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는 이제 국경 세관을 통과할 수 없다”고 전하였으며, “수산사업소마다 인민무력부에서 파견한 주재원들이 잡아오는 물고기를 인근 부대에 배정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소식통은 “군부대에 공급된 물고기가 벌써부터 종합시장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종합시장에서 물고기 값이 비싸니까 일부 군부대 간부들은 공급된 물고기를 종합시장에 내다 판다”고 밝힘.
- 北, 미래과학자거리 적극 선전...“기념비적 창조물”(10/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미래과학자거리의 상징 건물이라며 총 부지 면적 40만㎡, 연 건축 면적 87㎡에 달하는 53층 초고층아파트를 소개함.
 - 이에 김정은 黨 제1비서도 최근 이 거리에 대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건축물,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라면서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정책이 응축되고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건축예술의 극치, 상징으로 되는 과학기술전당이 건설됐다”고 평가했다고 통신이 전함.

다. 경제 상황

- 北 통신,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호, 저녁마다 북적”(10/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건조되어 영업을 시작한 대동강의 유람선 무지개호에 대하여 “기자가 무지개호를 찾았을 때 이곳은 많은 손님으로 흥성이고

있었다"고 26일 보도하면서, 무지개 호의 연면적이 1만 1천390여㎡, 길이는 120m, 너비는 25m, 배수량은 3천500 t 이며, 한 번에 1천 230여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민족요리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연회장, 벨트 뷔페식당, 야외갑판식당, 회전전망식당, 상점 등을 갖추었다고 소개함.

- 특히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직접 ‘무지개호’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난달 8일 이 배를 찾아 “칠색 영롱한 무지개 같다”, “대동강이 더욱 밝아졌다”며 찬사를 쏟아내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세계최고 감자수확량 선전(10/2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을 통해 “올해 백암군 ‘10월8일 종합농장’과 삼지연군 ‘중흥분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자수확을 거두었다는 내용의 강연회가 최근 모든 공장기업소들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북한이 강연을 통해 백암군 ‘10월8일 농장’이 올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량된 감자품종을 심어 정보당 60톤을 수확했고 삼지연군 중흥분장 역시 같은 품종으로 55톤을 수확했다며 최고의 감자수확량을 자랑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매체는 북한당국이 이런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내부 선전으로만 주장하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이 같은 강연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통의 지적을 소개하면서, “10월8일 농장과 같은 시범단위인 대흥단군의 감자생산량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강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에 “올해 양강도의 감자농사가 잘 된 것은 맞지만 강연의 내용은 지나친 과장”이라 전했다고 덧붙임.

■ 북 ‘태양열 판’ 회사 박람회서 첫 선(10/28, 조선신보, NK 뉴스)

- 조선신보는 28일 평양에서 열린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 ‘태양열 판’을 판매하는 ‘록색에네르기합작회사’ 관련 동영상을 소개하면서 최근 북한 내 가정, 새로 지은 공공 건물 등에서 태양열판의 사용이 점점 증가한다고 보도함.
- 이와 더불어 NK 뉴스는 조선신보가 인터뷰한 ‘록색에네르기합작회사’의 김혜련 부원이 “록색에네르기를 개발하고 활용하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바람에 따라, 280W부터 30W까지를 사용해 만드는 8가지의

다양한 유형의 태양열 판이 있다”고 선전했으며, ‘록색에너지합작회사’가 무역박람회에 처음 참가했으나 태양열판의 판매가 잘 된다고 주장했음을 전함.

- 유엔, “1~9월 외부 곡물 수입 크게 감소”(10/2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를 통해 9월 초 기준으로 북한이 외부로부터 수입한 곡물량이 12만 7천t으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 27만 t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함.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9월 초 현재 수입과 외부 지원을 통해 확보한 곡물은 14만2천t이라며, 식량 부족분 42만 1천t의 3분의1에 불과한 규모라고 밝히면서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량이 급감했다고 밝힘.

- 북, 환경파괴로 생물자원 급감(10/2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 황해북도의 소식통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가 외화벌이 사업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주요 외화벌이 품목이던 송이버섯과 실뱀장어의 수매량 급감을 보도함.
 - 특히 방송은 소식통이“이렇게 생산량이 적은 송이버섯도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 해마다 수출가격이 내리고 있고, 생물자원 수출이 외화벌이의 큰 몫을 차지했었는데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자원이 급감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덧붙임.

- “북한 내년 식량 부족분 100만…이번 정권 들어 최대”(10/29, 연합뉴스, 미국의소리)
 - 연합뉴스는 올해 북한 식량난의 주된 원인이 가뭄 때문이며, 북한 당국도 올해 가뭄을 ‘100년 만의 왕가물(가뭄)’이라고 표현할 만큼 선봉과 김책시를 제외한 25개 관측지점의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55% 수준에 불과했다고 전함.
 - 식량난과 관련하여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올해 7월 중순 들어 하루 식량 배급량을 250g으로 줄인 후 이달 들어서야 예년 수준인 380g으로 늘렸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이같은 식량 배급량은 여전히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임.

- 압록강대교 보수공사로 북 식품가 상승(10/29, 자유아시아방송)
 - 신의주와 단둥, 즉 단둥을 잇는 압록강대교, 즉 ‘조중친선다리’의 보수공사가 지연되면서 평안북도 국경지방의 중국산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이 보도함.
 - 한 대북소식통은 “최근 신의주 상인들과 전화통화를 해본 결과 맥주 등 식료품 가격이 약 20% 가량 올랐다”면서 “압록강대교 보수공사가 늦어지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에 밝힘.
 - 예를 들어 중국맥주 ‘압록강’, ‘설화’ 가격은 공사 이전에 인민폐 5위안이었지만, 현재 6~7위안에 장마당과 매대에서 팔리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임.

라. 대외 경제 관계

- 北,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서 투자유치 시도…성과 없는 듯(10/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7일 보도를 통해 리룡남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10여 명의 북한 경제대표단이 26일 베트남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 후이 호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등 주요 경제 부처·기관장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고 전함.
 - 또한 뉴스는 북한 경제대표단이 이에 앞서 지난주 인도네시아와 라오스를 방문해 투자 유치와 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현지 정부·기업 관계자들과도 의견을 나누었으나 북한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은 북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들어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전함.
- 러시아, WFP 대북 영양 지원에 2백만 달러 기부…‘목표액 52%’(10/2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세계식량계획(WFP)가 25일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러시아가 대북 사업에 미화 2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고 27일 보도하였으며, 다미안 킨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 사무소 대변인의 인터뷰를 통해 이 자금이 어린이와 수유모,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방송은 러시아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미화 9백만 달러에 달하며, 이로써 최대 지원국이 되었다고 전함.

- 호주 대북지원 전년보다 17% 감소(10/3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 30일 보도에 의하면 오스트랄리아 정부의 2015 회계연도 대북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17% 감소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약 9천만 호주 달러를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원했다고 국제개발청(AusAid)이 밝힘.
 - 국제개발청의 대변인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북지원금으로 미화로 약 230만 달러인 300만 오스트랄리아 달러를 집행했다고 25일 방송에 전함.
 - 오스트랄리아 정부의 대북지원은 유엔 산하 식량구호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지원에 집중됐으며, 지난 4월과 지난해 5월 세계식량계획에 각각 미화 약 230만 달러와 약 280만 달러를 기부해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에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 북, 스위스 시계 수입 반등(10/3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나라에 공을 세운 간부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스위스산 ‘명품 시계’는 지난해엔 전혀 수입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09개를 구입했다고 스위스시계산업연합은 30일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함.
 - 하지만 재작년 수입량인 561개와 비교해서는 별 차이가 없고, 2012년 수입량인 1천 539개와 비교해서는 60% 이상 감소한 터라 스위스 시계의 구입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박람회에도 적극적인 북한…전문가 “외자유치 의도”(11/1, 연합뉴스)
 - 코트라(KOTRA) ‘제4회 중조박람회 개최 결과’자료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18일 중국에서 열린 ‘중·조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북중박람회)에서 북한 기업을 위한 부스는 모두 104개가 설치됐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함.
 - 북한측 참가 인원은 지난해 2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두 배로 늘었으며, 코트라 다롄무역관은 “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인사 증가는 전시회 현장이나 단둥시내 호텔에서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함.
 - 북한과 중국이 2012년 시작된 북중박람회를 통해 3년간 유치한 투자액은 총 4억1천만 달러(한화 4천600억원)에 달한다고 뉴스는 전함.
 - 다롄무역관은 “2016년 박람회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이전 전시회에 비해 크게 달라질 전망”이라며 “단순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광천광산 흑연 생산공정 조업식, 10월 27일 태종수(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조업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0.27, 중앙통신)
- 단천제련소 폴리 유산철 생산공정 조업식, 10월 27일 최상건(국가과학기술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0.27, 중앙통신)
- 평양시 內 종합대학 교원과 연구사들, 과학기술 도입(식물성장촉진제와 복합영양액 개발 등) 성과 선전(10.27, 중앙통신)
-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대외경공업기술교류사, ‘다용도 접착제’ 개발(10.27, 중앙통신)
- 전국 방직 및 피복부문 과학기술발표회(조선과학기술총연맹 주최), 10월 27-28일 평양에서 진행 및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등 방직·피복부문 교원·기술자 등 참가(10.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운수부문 과학기술 발표회(조선과학기술총연맹 주최), 10월 27-28일 철도성 정보기술연구소에서 진행 및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육해운성 해운과학연구소 교원·연구사 등 참가(10.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사과 맛 품평회(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 올해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생산된 사과)」, 10월 28일 평양에서 진행 및 ‘수십종의 사과들을 품종별로 단맛·신맛·향기·수분 등 균중심사 방법’으로 평가(10.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전력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와 버섯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 10.28~29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각각 진행(10.29, 중앙통신)
- 제26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 전국206 가지 일용잡화전시회 · 전국 8월3일 인민소비품전시회,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10.30, 중앙통신)
- 김책공업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발표회 및 첨단기술제품전시회, 10월 29-31일 진행 및 ‘최신과학연구 성과들을 반영한 160여건 논문 발표·120여점의 첨단기술제품 출품’ 전시(10.31,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서도 사이버대학 ‘인기’...“사상교육·전문성 강화용”(10/29,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9일 주민들의 사상교육 강화 및 각 분야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세워진 사이버대학을 보도하며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20여 개 단위 110여 명의 학생들이 원격교육과정(사이버대학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함.
 - 30일 북한의 한 매체는 현재 북한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평성석탄

공업대학 등 주요 대학에 사이버대학이 개설돼 있으며 특히 이달 들어 첫 사이버대학 졸업생을 배출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사이버대학에는 1천700여 개 단위에서 1만 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나. 시장 관련

- 北 주민, 김치 점점 덜 담가…“장마당 증가 영향”(10/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7일 최근 중국으로 나온 함경남도 주민 소식통을 통해 북한 사회의 ‘장마당’ 증가로 인하여 주민들이 겨울철 식량으로 불리는 김치를 점점 덜 담그는 현상을 보도함.
 - 소식통은 “요즘에는 겨울철에도 돈만 있으면 배추나 무를 장마당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미련할 정도로 김장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농촌 주민 중에는 겨울에도 ‘비닐박막 온실’(비닐하우스)를 지어 오이나 가지를 재배해 시장에 파는 사람이 있다”며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하다 보니 돈벌이가 되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농민이 많이 생겼다”고 덧붙임.
- 북 장마당에 가짜 UN약 범람(10/2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보도를 통해 흔히 UN약이라고 통칭되는 대북 의약 지원품의 상당량이 북한 장마당에 빼돌려져 유통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모양만 똑같은 가짜 UN약품까지 범람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에 나온 함경북도 주민 소식통은 인터뷰를 통해 “시중에 가짜 UN약이 너무 많이 떠돌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UN약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방송에 밝혔으며, 평안북도의 주민 소식통도 “이런 가짜약 제조와 판매는 의약품의 포장과 내용물까지 감쪽같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뒤를 봐주는 권력자의 비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 北 개인 제조업 성행…“국영공장까지 임대”(10/27,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7일 평안남도 소식통을 통해 평안남도 순천에 위치한 ‘탄광기계공장’의 건물 일부가 신발을 만들려는 돈주에게 임대되었음을 전하면서 북한의 개인 자본이 국가 생산시설로 확장되는 현상을 북한 시장화의 또 다른 단면이라 보도함.

- 특히 소식통은 돈주들이 공장을 임대하는 이유를 ‘전기문제’ 때문이라고 전했으며, “그 공장에 전기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공장 간부들과 계약을 맺는다”면서 “대략 판매 이윤의 30%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합의된다”고 덧붙였다.
 - 소식통에 따르면 “공장 창고 건물을 돈주(錢主)에게 임대하여 '더벌이'를 실천하는 것은 공장 간부들에게도 이익”이지만, 이러한 '공장 건물 임대' 방식은 사민(私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부 공장에서만 통용되고 있다고 전함.
- 미 전문가 “신의주에서 최근 시장규모 빠르게 확대”(10/31, 연합뉴스)
- 연합뉴스 31일 보도에 의하면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틴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38노스’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신의주에서 시장의 규모가 110% 이상 늘어났다”고 밝힘.
 - 실버스틴 연구원은 신의주와 개성 등 북한의 12개 주요 도시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했으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물과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지역을 모두 합해 계산했다고 설명함.
 - 그는 인구 1인당 시장으로 쓰이는 지역의 면적으로는 이들 주요 도시 중 남포와 해주가 각각 1위와 2위였다고 하며, 외부와의 교역이 활발한 도시에서 시장도 발달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北 보위부, “한국산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간첩 혐의 적용 할 것”(10/26, NK뉴스)
- 데일리NK는 26일 무역일꾼들의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목인해 왔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SNS 메시지 기능 등이 북한의 중요 정보 유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삼성 스마트폰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함.

- 뉴스는 “특히 삼성 휴대전화는 중국산 휴대전화와는 달리 한글 입력이 가능하고 동영상까지 보낼 수 있는 부차 기능이 있어 한국의 간첩들과 내통하기 좋다는 것이 보위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한 함경북도 소식통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위부의 검열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전함.
 - 특히 소식통은 그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용인했던 무역일꾼에 대해서도 검열이 강화된 것에 대해 “중국을 수시로 드나드는 무역일꾼의 특성상 보위부와 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라도 간첩으로 내몰릴 수 있다”면서 “이번 휴대전화 검열에 대해 보위부와 인맥관계가 있는 일꾼들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덧붙였다.
- **김정은, 학생 마약사용 근절 지시(10/2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 북수의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통해 “학생들의 교내 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제때에 예방할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가 10월 17일 각 도당위원회 교육부를 통해 모든 학교들에 전달됐다고 보도함.
 - 특히 소식통은 청소년들의 마약소지와 관련하여 “10월 초에 함경북도 보안부가 등교를 하는 대학생과 고급중학교 학생들을 기습적으로 검열한 결과 이들 중 20여 명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어 마약범으로 체포되었다”며 “이들 대부분이 도급 당, 사법기관 간부 자녀들로 밝혀져 더욱 충격이 컸다”고 전함.
- **북, 중 주재원에 화교·조선족 경계령(10/3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중국에 주재하는 외화별이 일꾼들에 화교와 조선족을 경계하고 가급적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중국 변경도시의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최근 자국 공관을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무역 대표들에게 화교들과 조선족을 경계하고 통역이나 문건 번역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말 것이며 가능한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을 시달렸다”고 방송은 전함.

마. 사회 동향

- 北 여성, 한국산 한복재료 선호(10/2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에 복수의 대북무역업자들과 중국에 나온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치마저고리를 자주 입어야 하는 북한 여성들이 한국에서 생산된 옷감을 더 선호하고 있는 현상을 보도함.
 - 중국 요녕성 지방에서 도매업에 종사하는 한 대북무역업자는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무역주재원들과 사사여행자들이 한국산 한복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수소문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면서 심양과 단둥을 비롯한 도시에는 한국에서 한복재료만을 전문적으로 들여다 파는 매점도 생겨났다”고 방송에 알림.

- ‘짧은 의상에 속바지 노출’…달라진 北공연무대(10/28,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조선중앙TV가 27일 오후 '조선 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1만 명 대공연-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의 실황 녹화를 3시간40분 동안 내보내며 현대무용수 13명이 미니스커트 안에 입은 속바지를 그대로 노출하는 파격적 장면을 방송하였다고 28일 보도함.
 - 뉴스는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집권한 이후 이러한 파격성이 종종 감지되며, 김 제1비서가 만든 모란봉악단이 앞서 지난 2012년 7월 몸매가 드러나는 하얀 드레스와 10cm가 훌쩍 넘는 킬힐(kill heel)을 선보인 것이 그 예라고 덧붙임.

- “北, 작년 결핵 사망자 5천명…사망을 남한의 5배 이상”(10/29,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2015 세계 결핵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지난해 결핵 사망자가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캐린 웨이어 WHO 연구원이 인터뷰를 통해 "WHO는 정확한 다제내성 결핵 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북한 전역에서 약제 내성률을 조사할 계획"이라 말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WHO의 조사에 근거하여 북한의 결핵 환자가 총 11만 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442명 수준이며 이는 아시아에서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덧붙임.

- “평양에 김일성·김정일 새 동상 건립중”(10/29, 자유아시아방송, 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새 동상을 건립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커티스 델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RFA에 출연해 지난 8월6일 미국의 상업위성이 촬영한 평양시 룡성 구역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제2자연과학원 건물들 사이에 동상을 위한 받침대가 설치됐다고 밝힘.
 - 북한은 황해남도 해주에도 김일성·김정일의 동상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7~9월에는 황해북도 사리원과 남포, 평안남도 평성, 양강도 혜산시에 동상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연합뉴스가 덧붙였다.
 - 신의주, 강계, 나선, 청진, 원산, 함흥 등에서도 김일성·김정일의 동상을 볼 수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노동신문 “태권도 기본동작, 3천200개나 된다”(11/1,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일 ‘태권도의 구성요소와 경기종목’ 글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통 무도인 태권도는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종목이 다양해 다른 무도들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무도로 인정받고 있다”며 “태권도는 기본동작, 틀, 맞서기, 단련, 호신술로 구성돼 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기본동작은 힘의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공격과 방어의 개별 동작들로 3천200여개나 된다고 소개하면서 “틀은 태권도의 기본동작들을 리치와 뜻에 맞게 묶어 놓은 것으로서 상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선수의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전함.
 - 한편 연합뉴스는 2017년 국제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제20차 태권도 세계 선수권대회가 북한에서 열린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북한이 이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평양 청춘거리에 위치한 태권도전당의 무도종합훈련장, 심판원실, 기자회견실, 선수휴게실 등을 단장하는 재건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 “北 개발 최신 스마트폰 ‘평양’ 삼성 갤럭시와 비슷”(11/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주민 사이에서 ‘평양타치’라고 불리는 이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모양과 형식은 한국 삼성의 갤럭시와 비슷하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이 스마트폰은 아이폰 6보다 조금 작은 크기에 뒷면에는 ‘평양’이라고 쓰여 있다”며 “가격은 200~300달러”라고 설명하면서 “사진기, 음악 기능은

물론 문자를 뜻하는 ‘통보문’, 인터넷을 의미하는 ‘열람기’를 비롯해 녹음기와 달력 등 일반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모두 있다”며 “‘다국어사전’은 북한 학생과 공무원에게 인기가 있다”고 전함.

- 아울러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도 많다”며 “이 스마트폰의 특징으로는 와이파이(Wi-Fi), 즉 무선 데이터 전송 체계로는 인터넷과 연결할 수 없다”고 덧붙임.

-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현지에서 원격수강. 2010년 40명 시작, 현재 전국 각지 1,700개 단위 근로자 등 확대 수강) 첫기 졸업식, 10월 28일 진행(10.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15, 10월 26일 현재 정구·수영 등 일부 종목 결속 및 남자 축구 4강전 등 10월 31일까지 진행(10.28, 중앙통신)
- 황해남도 삼천금강요양소 준공식, 10월 29일 현지에서 진행(10.29, 중앙통신)
- 평안북도 영변군 읍지구, ‘아동공원’ 신설(10.29, 중앙방송)
- 국가우표발행국, 문화유산을 반영한 새 우표들(김홍도의 ‘대장간’ 등을 반영한 개별우표 2종)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들을 반영한 우표들(개별우표 9종)을 발행(10.29, 중앙통신)
- 北 공화국선수권대회, ‘야구·소프트볼·수구’경기 종료(10.29, 중앙방송)
- 평양문화전시관(연건평 2,000㎡), 새로 개건되어 참관 시작(10.30, 중앙통신)
- 북조선체육동맹 결성(‘45.11.1) 이래 지난 70년간 ‘北 선수들(역도 리홍천·유도 계순희 등)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올림픽 등 100여개 금메달 쟁취’ 선전(10.31,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카터 美국방, “北 핵개발 중단해야··6자회담 지속 추진”(11/1, 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 중인 에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일 “북한은 핵개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핵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 그는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않으며 6자회담에서 요구한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카터 장관은 한민구 장관과 함께 JSA에 있는 관측소(OP)에 올라 북한군 진영을 살펴봤으며 JSA에서 근무하는 장병들과 악수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나. 미·북 관계

- 미국 헤리티지, “북한, 미국 핵심이익에 가장 심각한 위협”(10/29, 연합뉴스)
 - 헤리티지 재단은 28일(현지시간) 발간한 ‘2016 남북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끼치는 위협의 정도가 ‘심각하다(severe)’고 평가했으며, 이 재단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는 북한이 처음임.
 - 헤리티지는 미국을 위협하는 6대 대상으로 ▲러시아 ▲이란 ▲중동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테러리즘 ▲중국 ▲북한을 꼽은 뒤 위협의 정도를 측정하면서 북한만을 ‘심각하다’고 평가했음.
 - 헤리티지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핵탄재 미사일 개발 능력을 증강하고 지난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과 지난 8월 남한에 대한 포격도발 등을 저지른 점을 반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헤리티지는 또 북한의 위협 양태를 ‘공격적(aggressive)’에서 ‘적대적(hostile)’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헤리티지는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8개로 추정했음.

다. 중·북 관계

- 북중러, ‘두만강 국제관광구’ 건설사업 본격 추진(10/30, 연합뉴스)
 - 30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지린(吉林)성·북한 나선시·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시정부가 추진하는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구 사업이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확정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 중 지린성의 주요 프로젝트로 확정됐음.
 - 이에 따라 지린성 정부는 북한, 러시아 측 파트너와 함께 국제관광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 연말까지 확정짓고 내년부터 건설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임.
 - 북중러 3개국 지방정부가 마련한 기본구상은 사업 초기 훈춘 광환에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구를 조성하면서 관광캠프장, 리조트, 민속촌, 국제면세점 등을 갖추고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며, 지린성은 이를 토대로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13·5규획 기간 중점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임.
 - 지린성 관계자는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의 최대 매력은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돌아갈 때 상품의 면세혜택을 누리는 것”이라며 “관광구 건설로 국가 간 인문교류 및 무역왕래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北 사이버공격 대응 논의(10/27,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27일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의 국방사이버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최근 공동의 안보 위협으로 대두한 북한의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 면밀한 분석·평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양측의 사이버 공조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 미국, “한·일 건설적 관계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10/29, 연합뉴스)
 - 애덤스 카티나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첫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데 대해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이라면서 “한·일 양국의 건설적 관계가 미국에 있어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카티나 대변인은 이어 “양국 정상회담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록히드마틴 다급해졌다…사드 논의 ‘치고 빠지기’ 비판 고조(10/31, 연합뉴스)
 - 록히드마틴의 대 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제니퍼 위틀로 홍보담당 수석부사장이 사드 문제 논의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의 논의를 알지 못한다.”고 전날의 주장을 하루 만에 뒤집었음.
 - 사드를 담당하는 현업 부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언급한 내용을 이튿날 홍보총책이 나서서 완전히 번복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며, 발언을 뒤바꾼 정확한 속사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워싱턴D.C. 내에선 언론을 이용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이 아니냐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음.

- 양국 정부의 논의가 기대대로 이뤄지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어 “논의가 시작됐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띄워 언론보도를 유도하고는 양국 정부가 부인하자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발뺌한 것이라는 고도의 ‘언론플레이’라는 추측이 있으며, 특히 다음 달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한·미 양국을 상대로 사드 논의에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풀이도 나옴.
- 논란의 발언을 한 마이크 트로츠키 부사장은 공식 회견석상에서 “공식·비공식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 바 있으며, 한·미 양국 정부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음.

■ 한미 합참, 서울서 군사위원회 회의…연합방위태세 점검(11/1, 연합뉴스)

-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1일 연례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M)를 열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음.
- 양국 합참은 이날 서울 합참 청사에서 열린 MCM 직후 배포한 공동보도문에서 “이번 제40차 MCM에서는 최근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 평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 및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경과를 논의했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공동보도문은 “한미 합참의장은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 강화 및 양국의 군사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62년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critical role)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양측은 군사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음.

나. 한·중 관계

■ 中,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로 중일관계 정상화 기대(10/26, 연합뉴스)

- 중국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재개와 관련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다시 건드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중일관계의 정상화를 기대했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그간 3국 정상회의의 중단이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다면 서도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가 3국간 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저우융성(周永生)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한중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며 “3국 정상회의는 3국 관계의 정상화를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신화통신은 3국 정상이 농업, 무역, 환경 등 영역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3국간 정치적 신뢰의 증진이 경제협력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3국 협력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랭경열(政冷經熱: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겁다) 관계가 되어선 안 되고 반드시 정치와 경제 모든 측면의 협력이 강화되는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화통신은 또 한국이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음.
- 리커창 오늘 한국 방문...TPP 견제 위한 지역경제협력 추진 전망(10/31, 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으며, 첫 날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둘째 날에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마지막 날인 2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경제협력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베이징 일부 관측통은 한중 양자회담에서 리 총리가 북핵 문제보다는 양국 경제협력 수준을 격상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리 총리가 이번 방한 기간 중 가장 역점을 둘 대목은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과거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중일 양자 회담이 열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베이징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양측이 양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은 역사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전히 소위 ‘밑당(밑고 당기기)’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 리커창 총리, “한반도비핵화 목표 견지...프로세스 추진해야”(10/31, 연합뉴스)
- 리커창 중국 총리는 31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비핵화 목표와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음.
 - 리 총리는 또 관련 국가들은 “당연히 현재 반도의 전반적인 긴장 완화 추세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하고 지속적으로 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CCTV는 전했다.

- ‘비핵화 프로세스’는 중국이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6자 회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리 총리는 또 남북 양측의 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굳건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 리커창, 차대통령에 메르켈 안부 전하며 “이웃집 마실 온 느낌”(11/1, 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 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안부를 전하며 “이웃집에 마실 나온 것 같다.”고 친밀감을 털어놨음.
 -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신사(中新社) 인터넷 판은 1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리 총리가 전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만찬 자리에서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인 자신의 한국방문 소감을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음.
 - 리 총리는 또 “메르켈 총리가 내게 박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줄 것을 청했다.”면서 방한 직후 박 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 기간에 특별히 메르켈 총리의 안부를 전달하기도 했음.
 - 두 총리는 전날 허페이에서 만찬을 마친 뒤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 메르켈 총리가 리 총리에게 영어로 “내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들었다. 박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임.
- 중국, 산둥성에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창설 추진(11/1, 연합뉴스)
 - 3년 반 만에 재개되는 1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모든 참석국이 만족하기 힘든 군 위안부 및 과거사 문제보다는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방안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지대 안에서 3국 교역상품에 대해 관세 및 무역제한조치를 철폐, 생산원가를 낮추고 상품 물류를 더욱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창설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 하고 있음.
 -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창설 구상은 2002년 처음 제기돼 논의가 이어지다 10년이 지난 2012년 11월 캄보디아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3국 경제통상장관 회의에서 공식협상 개시가 선포됐으며,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을 거치며 지난해 5월엔 3국간 투자 증진·보호를 위한 첫 제도적 합의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음.
 - 중국은 이 자유무역지대를 발판으로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자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음.

- 리커창 총리, “한중 FTA, 양국민에 큰 이익 줄 것”(11/1, 연합뉴스)
 - 방한 중인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조속한 발효를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FTA가 공식으로 발효되면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 정 의장은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남북 국회의장 회담의 개최를 제안했다.”면서 “남북대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총리가 북한을 설득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에 리 총리는 “최태복 의장에게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 지역 정세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많은 기여할 것이며, 중국은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정 의장은 “중국이 진행 중인 ‘일대일로’ 사업에서 동북아시아로의 라인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동북아시아 라인을 중국 정부가 깊이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리 총리는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서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모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가 있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회답했음.

다. 한·일 관계

- 산케이, “한국, 군위안부 관련 아베 사죄 요구…일본 난색”(10/26, 연합뉴스)
 -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아 아베 총리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제대로 보일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 실현’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 간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위안부, 역사인식 문제에서 일본은 몇 번이고 속았다. 정상회담에서 사죄해 차세대에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언제나 배신당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산케이는 소개했음.
 - 한일 외교당국은 11월 1일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아 내달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의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담이 열려도 결과물로서 공동성명이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산케이는 분석했음.

- 납북자 가족들, 한·일 정부에 납북자문제 조사 청원(10/26, 연합뉴스)
 -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최성룡 이사장은 “지난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가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 최 이사장은 청원서에서 “한일 두 정상은 공동으로 납북자 문제를 전면 조사해 납북자 부모님들의 한을 풀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납치 장소부터 현재까지 진실이 낱알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음.
 - 최 이사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미 2006년에 일본인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 씨와 남편 김영남 씨 부모에게 납북 문제의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납북자 문제에 큰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한일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대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북한은 한국과 일본의 어린 학생들을 납치해 놓고도 지금까지 납치 사실을 부인하거나 납치 이후의 생활에 대한 진실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日정부대변인, “韓,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 중요한 이웃”(10/26,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6일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쪽이 높게 나타난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현재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다양한 교류를 앞으로도 제대로 이어가고, 우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올 들어 외무성 홈페이지와 총리의 시정 연설문,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등의 한국 관련 기술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종전 내용을 삭제한 바 있음.
 - 스가 장관의 발언은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양국 사이에 조율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를 요구했다’는 산케이 신문의 이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으며, 양국 정상이 조건 없이 대화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음.

- 일본 관방장관, “한일 정상회담, 흥금 털어놓는 대화되길”(10/28,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첫 양자 정상회담에서 솔직히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28일 밝혔음.

- 하지만,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의제가 되느냐는 물음에는 “아까 정상회담이 막 결정됐으므로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부터 사무 당국이 (내용을) 채워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응했음.
- 그는 또 정상회담이 전제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일본 정부 견해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日정부 “위안부 입장 불변…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 해야”(10/30,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이제까지 밝혀온 대로”라며 “전제조건없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대신해 30일 기자회견에 나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副)장관은 내달 2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군위안부 문제를 매듭짓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음.
-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기초 아래 사안을 ‘정치·외교문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 日압박 통했나…유네스코, 기록유산 당사국간 조율 의무화 검토(11/1, 연합뉴스)

-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 문서의 내용에 여러 나라가 관련된 경우 관련국이 사전에 협의한 뒤 신청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이며, 방안이 내년 봄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면 2017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 일본의 요구대로 제도가 변경되면 향후 한·중이 함께 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등재를 신청하기 앞서 일본과 조율해야 함.
- 미국이 팔레스타인의 가입을 문제 삼으며 유네스코 분담금을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현재 유네스코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발언력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음.
- 요미우리는 “2017년 세계기록유산 심사에서 군위안부 자료 등록을 목표로 하는 중국과 한국이 일본과의 사전 협의에 난색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美함정 남중국해 中인공섬 12해리 내 첫 항해…中강력반발(10/27,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구축함 라센함이 남중국해의 수비 환초(중국어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약 22.2km) 이내를 남중국해 현지시간 이날 오전 항해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AFP통신이 워싱턴 발로 보도했음.
 -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여러 번 시사하며, 남중국해를 비롯한 모든 공해상에서 항해의 자유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왔음.
 - 그러나 실제로 군함을 파견한 것은 지난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사군도 해역에 미국이 들어간 것은 지난 2012년이 마지막임.
 - 구축함 항해 사실이 알려지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미국 측의 조치에 대해 “우리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미국 측에 마땅히 심사숙고해 행동할 것을 권고한다.”고 촉구했음.
- 미 군함 접근 남중국해 환초는 영유권 분쟁 대표 인공섬(10/27, 연합뉴스)
 - 27일 미국 군함이 접근한 남중국해 수비 환초(중국어명 주비자오·渚碧礁)와 미스치프 환초(중국어명 메이지자오·美濟礁)는 중국과 주변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대표적인 인공섬임.
 - 중국이 영유권 강화를 위해 암초를 매립해 만든 섬들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해역을 사이에 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어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썬영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있음.
 - 면적은 수비 환초가 3.95km², 미스치프 환초가 5.42km²라고 홍콩 봉황망이 전했으며, 현재 중국은 이들 인공섬에 활주로와 비행장을 건설 중이고 스프래틀리 군도의 산호초인 화양자오(華陽礁)와 츠과자오(赤瓜礁)에 최근 높이 50m의 등대를 설치 및 가동에 들어갔다고 알려짐.

- 중국은 그동안 “기원전 2세기 한(漢) 무제(武帝) 때부터 남해(남중국해)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시작했다.”며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되는 ‘남해 9단선’을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이 자국 어민들의 전통적인 조업 지역으로 자신들의 영토라며 중국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음.
- 中, “남중국해 인공섬 진입 美구축함 추적…엄중항의”(10/27,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이날 루강(陸慷)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미국의 구축함 라센함이 중국 정부의 허가도 없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 도서의 인근해역에 ‘불법’ 진입했다.”면서 중국의 유관 당국이 감시, 추적, 경고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음.
 - 루 대변인은 “미국의 이런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위협하고, 섬에 체류하는 인력과 시설의 안보도 위협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해친다.”며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음.
 - 그는 난사군도에 대해 “중국이 논쟁의 여지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공섬 건설행위에 대해서도 “중국 영토 내에서 전개되는 주권 범위 내의 일”이라고 규정했음.
 - 그는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어떤 국가든 간에 중국을 방해하겠다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 한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가속화하고 스스로의 건설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으며, 이는 중국이 인공섬 건설과 시설확충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향후 행동에 따라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 한 것으로 풀이됨.
- 중국 외교부, 주중 미 대사 불러 미 군함 사건 항의(10/27,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장예쑤이(張業濤) 상무부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군함이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한 것과 관련 주중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러시아 RT TV가 중국 CCTV를 인용해 보도했음.
 - 장 부부장은 맥스 보커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에게 미국 구축함 라센함이 남중국해의 수비 환초(중국어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약 22.2km) 이내에서 항해한 것에 대해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음.
 - 장 부부장은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해를 손상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 카터 美국방, “국제법 허락하는 한 언제, 어디서든 항행할 것”(10/28,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국제법이 허락하는 지역이면 어느 곳이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카터 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작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의 이번 작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중 ‘남중국해’ 일단 대화모드…확전 경계하는 듯(10/29, 연합뉴스)
 -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인 우성리와 화상회의(VTC) 회견 형식의 군사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국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 등이 28일 보도했다.
 - 양국 군 수뇌부가 모처럼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되지만, 이번 회담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양측이 기존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미국은 이 회담에서 해군 구축함 라센함(DDG 82)이 27일 오전(남중국해 현지시간) 남중국해의 수비 환초(중국어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약 22.2km) 이내로 진입한 것은 국제법상으로 허용된 항행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은 특히 앞으로도 이 같은 항행이 정례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자국의 소유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 해군 구축함의 항행을 ‘영유권 침해’라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중, 남중국해 갈등에도 군사 교류 지속할 것(10/29, 연합뉴스)
 -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 해군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해역에 구축함을 파견한 것이 양국 군사교류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 웨리(薛力) 중국사회과학원 국제 정세 전문가는 “중국이 이번 일로 미국과의 접촉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측이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쑨저(孫哲) 칭화(淸華)대 교수도 양국 군이 어떠한 분쟁도 양국 관계의 다른 분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 상하이(上海)의 군사전문가인 니러슝(倪樂雄)은 과거 미국 항공모함의 대만해협 진입으로 초래된 위기를 언급하면서 “당시 양측이 군사력을 과시했지만, 동시에 대화를 진행해 마침내 균형점을 찾았다.”고 상기시켰음.
 - 그는 미국이 이른바 항해의 자유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남중국해로 군함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중국도 계속 이를 비난하면서 함정을 보내 미 군함을 추격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도 균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대만해협 사태 때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中, “국제협약 가입도 안한 미국이 무해통항권 주장”(10/29, 연합뉴스)
 - 중국의 관영 영문일간 차이나데일리는 29일 유엔해양법협약 조항에 근거해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암초 및 환초 매립공사가 중국이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섬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이 ‘무해통항권’을 명분으로 삼아 구축함 라센호를 최근 문제의 남중국해 해역에 근접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직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무해통항권을 주장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중국은 미국이 이들 수역에 대한 무해통항을 원한다면 중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국의 ‘영해와 인근지역에 관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밀었음.
 - 여기에도 군함이 다른 국가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할 수 있느냐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국제재판소로 간 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미국은 “환영”(10/30, 연합뉴스)
 -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다뤄지게 됐음.
 - PCA는 “주권과 관련한 문제로 PCA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을 본격적으로 중재해 내년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임.
 - 앞서 필리핀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고 국제재판소 제소를 추진했으며 중국은 PCA의 중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남중국해 분쟁은 일대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 최근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구축함을 파견해 중국과 갈등을 빚은 미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다루기로 한 PCA의 결정을 환영했음.
- 중국 군사령관, “美, 도발 지속하면 우발적 충돌 일어날 수도”(10/30, 연합뉴스)
 - 우성리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은 전날 밤 진행된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의 화상회의 형식의 회담에서 “중국해군 함정은 양국관계의 대국(大局)에 따라 ‘해상에서의 돌발적 조우 규칙’을 운용하며 미 함정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며 양국의 최일선에 배치된 해·공군 사이에 심각한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음.
 - 또 미 함정의 이번 남중국해 인공섬 해역 진입을 “극히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며 ‘엄중한 항의’를 표시했음.
 - 우 사령관은 “중국은 난사군도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기어코 계속해서 중국의 우려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부득이 필요에 따라 일체의 필요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음.
 -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이에 미 함정의 남중국해 항해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항해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일방의 편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바. 미·일 관계

- 日정부대변인, “美군함 남중국해 파견, 美와 긴밀히 정보교환”(10/27,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의 인공섬 12해리(약 22.2km) 내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에 관해 “긴밀하게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 스가 관방장관은 “현상을 변경해서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인 행동은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우려 사항”이라며 중국이 남중국해를 메워 거점을 만드는 것을 비판했음.
 - 그는 “미군 작전에 관해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을 삼가고 싶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반복해 말씀드렸듯이 열려 있고 평화로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아베, “美군함 남중국해 항행, 국제법에 따른 행위”(10/27,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미국이 군함을 파견한 것에 지지의 뜻을 표명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국이 구축함 라센함을 남중국해의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약 22.2km) 내에서 27일(현지시간) 항해하도록 한 것에 관해 “국제법을 기준으로 한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음.
 -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동행한 기자들에게 “일방적인 행동은 국제사회 공통의 우려”라며 이같이 언급했음.

- 미군-日해상자위대 합정, 남중국해서 연합 훈련 실시(10/29,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한 가운데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부대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후유즈키’가 조만간 남중국해 남쪽에 있는 보르네오 섬 북쪽 해상을 항행함.
 - 양측 합정은 최근 미국 해군과 인도 해군이 인도양 벵골만에서 실시한 연합훈련 ‘말라바르(Malabar)’에 참가했다가 싱가포르 창이 항(港)에 기항한 상태임.
 - 마이니치는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이 매립 공사를 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인공섬에서 12해리(약 22.2km) 이내에 진입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장래에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합동으로 경계·감시 활동을 벌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사. 미·러 관계

- 나토, 러시아 접경 병력 증강배치 추진…서방vs러·중 대립 격화(10/29, 연합뉴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나토가 폴란드와 발트 3국에 각각 800~1천명 규모의 4개 대대를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 가운데 러시아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맞선 중국과 머리를 맞대고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서방과 러시아-중국 간 대립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과 대부분 서유럽 국가들은 병력 증강에 찬성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영원한 적으로 돌리기를 원치 않는 독일만 망설이고 있어 좀 더 완만한 병력 증강 방안을 지지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이에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주도하는 중앙아시아 다자 안보기구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회의를 소집해 안보 협력을 논의했음.
- 러시아와 중국 주도로 출범해 '유라시아판 나토'로 불리는 SCO의 국방장관 회의는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대립하고, 구미권이 러시아와 동유럽권을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열린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 한반도 공해상 美항모에 러 전투기 근접비행...미군 대응출격(10/30, 연합뉴스)
 - 한반도 동쪽 공해상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항공모함에 근접하면서 미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는 일이 있었다고 미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밝혔음.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7일 러시아 전투기 TU-142 베어기 2대가 고도 500피트 상공에서 한반도 동쪽 공해상의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1마일(1.6km) 거리로 근접함에 따라 미군 FA-18기 4대가 즉각 대응 출격했다고 말했음.
 -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도 "러시아 전투기가 로널드 레이건호에 근접해 FA-18기를 발진시켰다."고 확인했으며, 다만 어니스트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와의 이번 조우가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 중·일 관계

- 일본, 영국에 '中 인권·해양진출' 우려 전달 방침(10/27,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영국 국빈방문 때 영국이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와 인권 문제를 비판하지 않은데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음.
 - 통신에 의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르면 주중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과의 전화 회담을 통해 우려의 뜻을 전할 예정임.
 - 기시다 외무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다른 나라와의 영유권 갈등이 있는 해역에서 중국이 보이는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고, "법의 지배와 항해의 자유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또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충분치 않다는 인식을 전할 방침임.
 - 이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지난 21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에 대한 비판을 회피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영국에 우려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 **중외교부장, “일본, 이름답지 않은 역사와 단절하라”(10/27, 연합뉴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중국 공공외교협회 주최 한중일 토론회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한중일은 21세기 들어 경제협력 등을 통해 부단히 관계를 증진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수년 간 역사문제, (일본의) 역사 역주행으로 3국 협력이 엄중한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 왕 부장은 “시간은 역사문제가 3국 협력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을 증명해준다.”며 “역사문제를 잘 처리하면 3국 협력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멈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웃의 사립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이 진심과 성의로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당시의 이름답지 않은 역사와 통쾌하게 단절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중한 인민들의 손을 잡기를 바란다.”며 일본에 과거사 반성을 거듭 촉구했음.
 - 한중일 정상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나온 중국 고위당국자의 이러한 신랄한 역사공세는 중국이 이번 3국 정상회의 무대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화두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 함.

- **중국, ‘일본인 4명 스파이 혐의 구속’ 공식 확인(10/29, 연합뉴스)**
 - 29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허전량(何振良) 주일본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은 전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일본인 4명이 중국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고 밝혔으며, 구속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허 공사참사관은 추가로 구속 사실을 확인한 2명 가운데 1명인 일본인 여성은 ‘형사구류’ 상태이며 나머지 한 명인 일본인 남성은 올해 6월 하순부터 ‘거주감시’라는 형태로 구금돼 있다고 설명했다.
 - 요미우리신문은 두 가지 모두 정식 체포 전에 이뤄지는 구속 조치이며 거주감시는 호텔 등에서 연금 상태로 두는 것이라고 전했다.
 - 요미우리신문은 구속된 남성은 탈북자를 지원하는 활동에 관여했으며 은행 계좌를 부정하게 개설한 것을 이유로 구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음.

- **아베, 중리커창과 회담서 남중국해 우려 전달 방침(10/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1월 1일 서울에서 열릴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때 중국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암초 매립과 인공섬 조성에 강한 우려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음.

- 통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영해를 설정한 중국의 조치를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로 규정하고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에 입각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임.
 - 중국을 향한 아베 총리의 우려 표명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해역으로 군함을 보낸 미국의 조치를 측면 지원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지만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 더불어 아베 총리는 중국이 추진 중인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중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 연락 메커니즘’ 조기 운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며, 이와 함께 간접 협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일본인 문제도 논의한다는 구상임.
- 리커창 총리, ‘역사직시’ 촉구…아베 총리 “양국관계 개선 내 신념”(11/1, 연합뉴스)
 - 리커창 중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오후 서울에서 회담을 열어 중일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면서 과거사 문제 등 갈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음.
 - 리 총리는 최근 몇 년간의 양국관계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양국이 모두 그 원인을 알고 있다”며 “과거를 돌아보며 그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는 정신에 입각해 양국 간 정치적 관계에서의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어 양국 간 ‘전략적 호혜관계의 총체적인 발전을 확고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나는 2006년 총리 취임 후 곧바로 중국을 처음 방문하고 전략적 호혜 관계의 개념을 제창했다”며 “이 사고에 입각해 일중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은 나의 흔들림 없는 신념”이라고 말했다.
 - 두 총리는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회담 재개를 모색하고,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 연락 메커니즘의 조기 운용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중과 협력 강조 아베…한·중 역사공조 균열 모색하나(11/1,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서울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협력을 강조하려는 태도를 드러냄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언론에 공개된 회담 모두 발언에서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는 정신”을 거론하며 아베의 아킬레스건인 역사인식 문제를 건드렸지만 아베는 맞받아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 또 이날 정상회담 관련 일본 언론 보도에는 두 총리가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회담 재개를 모색하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 연락 메커니즘의 조기 운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사실이 소개됐음.
- 아울러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 일본이 목소리를 낼 법한 현안에 대한 아베 총리의 구체적인 언급은 일본 언론에 소개되지 않았음.
- 이번 회담 전까지 일본 정부는 중국이 만든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해역에 군함을 보낸 미국의 조치를 지지하고,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중일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역사문제와 관련한 ‘1(일본)대 2(한국·중국)’의 불리한 구도를 깨려는 행보로 풀이됨.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국제사회 인권 비판에 적극 대응(10/26, 미국의소리)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유럽연합 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초청”했었다고 밝혔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두 사람에게 대한 초청이 인권 분야에서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은 지난해 말에도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했었다.
 - 물론 두 번 다 방북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초청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다.
 - 북한은 또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268개 권고안 가운데 113개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 앞서 4년 전 심사 때는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과 비교해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심사에 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북한 외무상으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한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인권 분야에서 기술적인 협조와 접촉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국제사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던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오랫동안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 국제사회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것임.
 -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0일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점증하는 비판이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이 인권 침해에 대한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컬럼비아대학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인권 문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초청한 것도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음.
-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면서, 북한인권 결의안 가운데 북한 최고 지도자와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암시하는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음.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유엔과 교류하겠다는 일부 전례 없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한 교류와 협력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 “북 나선홍수 인명피해 수백 명 달해”(10/28, 자유아시아방송)

- 태풍 15호 ‘고니’가 나선지방을 강타한 것은 지난 8월 22일임.
-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선봉지구를 덮쳐 적지 않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지만, 북한의 보도와 달리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매체가 인명피해를 40명이라고 밝혔지만,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대북 사업가들은 사망자가 적어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사업가는 “선봉지구에 물난리가 났을 때 인민보안서에 갇혀있던 죄수 수백 명이 물에 잠겨 죽었다는 말을 중국 사업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음.
- 그는 “장맛비로 불이 붙어나기 시작하자, 인민보안당국이 수감자들을 방치한 채 달아났다”면서 “감옥이 홍수에 잠겨 피해는 상당히 컸다”고 언급했음.
- 선봉지구에는 인민보안서가 관할하는 수감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붙잡힌 생계형 죄수들이 적지 않게 갇혀있었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임.
- 그는 “북한 보안당국이 화재,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해도 감옥 문을 열고 수감자들을 풀어줄 리 만무하다”면서 “범죄자를 놔주면 사회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음.
- 북한 위성사진 분석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나선시에 적어도 두 개의 공안기관, 즉 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홍수로 살림집 1천70여동이 파괴되고 5천여세대가 파손되었다고 보도했지만, 한 달 새에 1천800여세대의 주택을 부리나케 지어 ‘김정은 선물’로 주민들에게 공급했다고 보도했음.

■ 북 장마당에 가짜 UN약 범람(10/2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이나 남한 등 외부세계에서는 해마다 상당량의 의약품을 인도적 지원의 하나로 북한에 제공하고 있음.
- 이들 약품들 중에는 한글로 된 설명서가 있어 남한 의약품인 줄 뻔히 안다고 해도 남조선 약, 또는 아랫동네 약이라는 말이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에 UN약이라고 부르는 것임.
- 무상치료를 자랑하는 북한이지만 병원에 가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환자 본인이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게 현재 북한의 의료실정임.
-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 떠도는 가짜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최근 중국에 나온 함경북도 주민 소식통은 “시중에 가짜 UN약이 너무 많이 떠돌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UN약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음.
- “약의 모양은 물론 포장지와 용기, 심지어는 약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까지 똑같이 만든 가짜 UN약이 진짜와 뒤섞여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전한 소식통은 “이런 약품은 직접 먹어보기 전에는 진위를 알 수 없어 의사들도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소식통은 “가짜를 만들기가 손쉬운 소화제나 두통약은 물론 가짜 결핵약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렇듯 북한에서 가짜 의약품이 범람하다보니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보따리 상인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상품 목록에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편 중국에서 보따리 상인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의약품 중에는 남한 의약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들어가는 상인들은 북한세관 검열을 통과하기 위한 온갖 기발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 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방북 세부사항 협의 중(10/29, 미국의소리)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8일 북한 당국과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방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뉴욕에서 자이드 최고대표를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뉴욕을 방문했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현재 북한 측과 자이드 특별대표의 방북 사전 준비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 앞서 북한은 지난 1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유럽연합 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초청했지만 유럽연합이 이미 합의됐던 전권대표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유럽연합 대변인은 지난 21일 유럽연합이 방북을 취소했다는 북한 측 주장을 부인하면서,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은 가능한 최상의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북한은 지난해 10월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북한으로 초청했지만 양측 간 견해차이로 두 사람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다.
- 북한, '해외 노동자 강제노동' 유엔 회견에 "비방중상"(10/31, 연합뉴스)
 - 북한은 31일 자국의 해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악랄한 비방중상"이라고 반박했다.
 -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얼마 전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황설수설하면서 허튼 나발을 늘어놓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대변인은 "우리 해외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이 다른 나라 이민노동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해 현지에서 찬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도 많다”고 주장했다.

- 그는 또 “최근 일부 나라에서 기자 등 신분으로 위장한 불순분자들이 우리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이스크레한(어둑어둑한) 장소에서 얼굴을 가린 사람을 현지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인 듯이 내세워 ‘한심한 노동환경’에 대해 증언하듯 한 사실 등을 놓고 봐도 적대세력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한 인권 모략에 광분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대변인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시기 유엔의 모자를 쓰고 주권국가에 대한 제도 전복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발언을 하고도 사죄 한마디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놀아대 많은 나라의 눈총을 받았던 전적이 있는 자”라고 비난했음.

2. 북한인권

- 변협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알린다(10/26, 대한변협신문)
 -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소책자가 발간됨.
 -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협회를 대표해 유엔 등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 시 전달할 북한인권 실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이번에 변협이 발간하는 소책자는 2014년 발간된 북한인권백서 내용(이동권, 정치범수용소, 생명권, 정보접근권 등)을 토대로 최근 탈북자들의 인터뷰 결과 등을 추가할 예정임.
 - 변협은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인권백서’ 국·영문판을 발간해오고 있으며, 이번 소책자 역시 국·영문판으로 제작될 예정임.
 - 발간된 소책자는 북한 인권 관련 NGO 단체들과 유엔 회원국의 각 대사관, 국제기구 등에 송부할 예정임.
 - 대한변협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는 이미 보고서를 보내 상황을 알렸음.
 - 한편 지난해 말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고, 유엔 안보리도 사상 최초로 이 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했음.

- 지난 6월 유엔 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돼 북한의 반인도범죄자처벌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음.
- 미 고위 관리 “외부 정보가 대북 인권의 핵심 전략”(10/28, 미국의소리)
 -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북한에서 외부 정보 공유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암시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나라 밖의 라디오 방송 등 외부 매체를 접하는 주민들 역시 계속 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는 것임.
 - 버스비 부차관보는 국제사회의 정보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게 미국의 우선정책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독립적인 정보 접촉을 늘리도록 하는 것은 미 대북 인권 전략의 중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를 위해 2014년 회계연도에 ‘VOA’와 ‘RFA’가 하루 11시간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8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 또 국무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방송국 등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버스비 부차관보는 특히 이런 정보 유입을 통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탈북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탈북민들은 어떤 종류의 정보를 북한에 보내야 하고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와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임.
 - 이날 오찬연설을 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역시 북한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외부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방송 등 여러 매체들과 인트라넷이나 손전화기(휴대폰)에 넣을 수 있는 SIM카드에 정보를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이 이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
 -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음.
 - 한국 정부가 여러 사안들을 우려해 대북방송에 매우 신중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제 모든 한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메시지를 북한에 있는 사촌과 삼촌 등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란 지적임.

-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 'BBC' 방송에도 대북 한국어 단파 방송 개시를 권고해 최근 개설 결정이 났다며 한국 정부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에 다양한 정보를 보내고 있는 한국의 탈북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음.
 - 15호 요덕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는 USB를 북한에 보내는 게 지금은 대세라며 메모리에 영화 100편까지 담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세계 최대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한국어 버전을 USB에 담아 북한인들이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 전달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과거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각각 면담했던 강 대표와 김 대표는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을 타파하는 진실한 정보로 북한 주민들을 계몽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루스만 “북한 인권침해 여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10/29, 연합뉴스)
-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전날 유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에서 여전히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과 적법 절차를 무시한 처형, 자의적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통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많은 북한 주민이 해외에 파견돼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명백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표결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바 있음.

-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들이 새로운 결의안 작성에 돌입하는 등 ICC 회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작년 채택 당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ICC에 회부될 가능성은 희박함.
 - 이와 관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12월 열리는 안보리 회의가 중요하다”며 “회의 결과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를 결정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음.
 - 그는 2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각국 정부 대표와 북한인권상황을 논의할 예정임.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묻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 북한인권결의안,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상정(10/29, 미국의소리)
- 유럽연합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오는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유럽연합 대변인이 27일 밝혔음.
 -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일본과 함께 북한인권 결의안을 작성해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있음.
 - 양측은 올해도 공동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고, 현재 회원국들을 상대로 비공개 회람을 진행하고 있음.
 - 제3위원회는 다음달 5일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식 소개하는 회의를 열고 추후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임.
 - 유럽연합 대변인은 다음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어 유엔총회가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음.
 - 앞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지난해 채택됐던 결의안 내용은 물론 올해 추가로 파악된 북한 인도주의 상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는 등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음.

- 북한은 지난해 결의안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올해도 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대해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음.
- 미국 뉴욕 한복판에 북한인권 관련 대형 광고판(10/29, 미국의소리)
 -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 측은 다음달 2일부터 4주 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대형 광고판을 설치한다고 밝혔음.
 -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인 ICNK는 맨해튼 42번가 인근 번화가 두 곳에 광고판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전후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문구와 피해자 사진 등이 담긴다고 전했다.
 -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광고 게재와 관련해 11월 유엔 제3위원회와 총회에서 논의될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음.
- 국제인권단체들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 열어야’(10/30, 미국의소리)
 - 국제사회 9개 주요 인권단체들이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서한을 보냈음.
 - 이들 단체들은 서한에서 안보리가 올해 안에 북한인권을 다루는 공식 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음.
 -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이 같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임.
 - 단체들은 지난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자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음.
 - 이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데 기여했다며, 이같은 흐름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계속해서 적극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체들은 특히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여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유린자들을 처벌하는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서한은 휴먼 라이즈 워치와 프리덤 하우스,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재단, 크리스천 솔리데리티 월드와이드, 국제인권연맹 FIDH, 미국북한인권위원회 HRNK,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북한인권시민연합 NKHR이 공동 작성했음.

-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음.
 -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이후 3년 동안 이 문제를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논의될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3년 간 유효기간이 연장됨.
 - 한편 미국의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HRF는 28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음.
 - 인권재단의 가리 카스파로프 회장과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북한의 고통에 대한 한국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특히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음.
 -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고, 캐나다에서도 북한인권의 날이 있으며, 유엔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돼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10년이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인권재단은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외부 정보는 김 씨 일가 우상화에 세뇌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해독제라고 말했음.
 - 인권재단은 한국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 단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와 옛 소련의 붕괴를 볼 때, 국제적인 압력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음.
- 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 “북한노동자 5만명 외국서 외화벌이”(10/30, 연합뉴스)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고용돼 북한의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가 현재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유엔에 보고됐음.
 - 이들은 한 달 평균 120~150달러의 임금을 받고 광산, 벌목장, 건설현장, 섬유 및 의류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과 최근 유엔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이런 조건에서 일하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음.

- 이들이 일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알제리와 앙골라, 캄보디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이었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이들은 저임금뿐 아니라 음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고, 하루 근로시간이 최장 20시간에 달하거나 한 달 중 휴일이 1~2일에 불과한 극단적 경우도 있었음.
 - 또 자신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 채 북한의 보안요원에 의해 근로행위를 감시받고 있었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서방의 경제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진 북한 정부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며, 이런 경로로 조성되는 외화 규모가 연간 12억 달러(1조3천734억 원)~23억 달러(2조6천323억 원)로 추산된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 정부의 행위가 강제노동을 금지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며, 이들을 고용한 기업은 불법 강제노동과 결탁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며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음.
 - 그는 “북한에서 여전히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과 적법 절차를 무시한 처형, 자의적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통해 공포심을 불리일으키고 있다”면서 “북한은 명백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특히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상정…인권침해 책임 규명 강조(10/31, 미국의소리)
 - 유엔총회에서 표결에 부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음.
 - ‘V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명시했음.

- 초안은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음.
-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안보리가 이 문제에 계속 적극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에서 지난 수 십년 간 정부의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인정했음.
- 아울러 북한 당국이 COI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인권 유린 등 각종 인권 침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협력해 책임을 규명하고, 그 같은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의안 초안은 이어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과,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토론회가 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 아울러 초안은 이번 달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것을 환영하면서, 남북한이 더 큰 규모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밖에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할 것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 특히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모두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음.
-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 결의안 초안이 다음달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결의안은 다음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되며, 유엔총회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3. 탈북자

- 링크 “탈북자 400명 구출”(10/29, 자유아시아방송)
 - 링크의 저스틴 윌러(Justin Wheeler) 부회장은 링크가 2010년 중국 내 탈북자 구출 사업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고 밝혔음.
 - 링크가 구출한 탈북자 405명 중 여성이 277명으로 남성 128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데,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80명에 달함.
 - 또한 가족과 함께 구출된 경우도 196명으로 절반이 되는데, 먼저 탈북해 한국이나 미국 등 제3국에 정착한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해 탈출한 경우도 185명임.
 -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370여 명으로 대다수이고 이 중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도 30명이 넘음.
 - 링크는 해마다 수 천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적·경제적 억압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다고 설명했다.
 -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과 처형 등 극심한 처벌을 당하거나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신매매 등의 피해에 노출되는 탈북자를 구출하는 데 링크가 나선 것임.
 - 링크는 탈북자 구출 이외에도 400여 명의 탈북자의 제3국 정착을 지원하고, 탈북자 교육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벌이고 있음.
 - 특히 탈북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사업을 통해 25명의 탈북자에게 영어와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지원했으며, 이 중 세 명은 해외에 나가 공부를 하거나 직업 개발을 하도록 도왔음.
 - 윌러 부회장은 이외에도 탈북하다 강제북송돼 교화소에서 4년을 보낸 후 재탈북했지만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여성, 강제북송 위기에서 이 단체가 극적으로 구한 남성, 태어나 처음으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면서 한국에 정착한 지 4개월 만에 키가 10센티미터나 자란 고아 출신 탈북 소녀 등 이 단체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소개했음.

4. 이산가족

- 박근혜 대통령 “생사확인 상봉정례화에 노력”(10/27, 자유아시아방송)
 -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남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는 6만6천여 명임.
 - 일반적으로 상봉행사가 한 번 열리게 되면 100명 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 상봉에 선정되는 것은 그야말로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일임.

- 앞으로 660회 상봉행사를 해야 모두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 1년에 10회를 한다고 해도 66년이 걸리는 셈임.
 - 그러나 이산가족들은 앞으로 20년 정도면 대부분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 때문에 남한 정부도 이번 상봉행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및 상봉 정례화를 강조했다.
 - 남북 적십자사는 이번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세 차례의 공식 접촉과 두 차례의 비공식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음.
 - 북측은 상봉 행사장에서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음.
 - 실제로 북측 적십자중앙위원회 리충복 위원장은 지난 24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북측 주최 환영만찬에서 남측 취재단에게 “이번 상봉 행사가 끝나면 상시 접촉과 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관련 문제들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후속 협의에 북측이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향후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심리치료 시작...영상편지도 제작(10/29, 미국의소리)
 - 한국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다음달부터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참석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후유증 심리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상봉에 참석한 가족 643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봉 후 심리 상태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됨.
 -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전국의 적십자사 지사를 통해 심리치료를 실시함.
 - 심리치료는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며,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전문병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치료를 병행할 계획임.
 -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3%가 상봉 후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36%는 ‘상봉 이후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답했음.
 - 또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응답도 8.7%였음.
 -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그러나 상봉 이후 심리치료보다 상봉 정례화나 서신 교환과 같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한국 정부는 적십자 본회담이 열리면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임.
- 대한적십자사는 일단 올해 말까지 이산가족 1만 명의 영상편지 제작에 착수했음.
- 10분 남짓 분량의 영상편지에는 안부 인사와 함께 어릴 적 추억과 고향 이야기 등이 담기며, 제작에는 남북협력기금 174만 달러가 사용됨.

5. 남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미CFK, 내달 결핵·간염 치료차 방북(10/27, 자유아시아방송)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다음 달 초 방북해서 진행 중인 공사들을 확인하고 국립 결핵 연구소에서 후속 훈련을 제공한다고 최근 후원자들에 보낸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 이 단체의 하이디 리튼 상임이사는 올해 마지막 지원 사업이 될 이번 방북에 대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B형 간염 치료를 준비하고 북한 당국과 추가 의료 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 단체가 지원 사업을 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우물 굴착 공사와 태양 에너지나 중력을 이용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와함께 비닐하우스에 필요한 비닐 부품들과 트랙터 장비에 필요한 예비 부품과 의료 시설에 있는 환자용 매트도 북한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후원자들에게 보낸 2015년의 마지막 소식지에는 내년 방북 지원 사업이 상세히 소개되었음.
 - 총 11개 지원 사업에 116만 5천200여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 단체의 주요 대북 사업인 B형 간염과 결핵 등 의료 지원을 위한 19만 달러와 북한 주민의 생활과 위생을 위해 최소한 6개 우물을 추가로 팔 계획이라며 총 11만 2천100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북한의 전기공급 부족으로 해가 지면 대부분의 결핵과 간염 치료소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태양열을 이용한 조명 시설 10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약 8만2천50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음.
- 뉴질랜드 단체, 북에 트랙터 지원(10/28, 자유아시아방송)
 - 뉴질랜드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친선협회는 자매 결연을 맺은 평양 인근의 협동 농장을 최근 방문해 지난 8월 보낸 트랙터 즉 트랙터 6대의 활용 현장을 확인했다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 이 단체가 지원하는 삼봉 협동농장은 평양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의 900 헥타르 규모임.
 - 약 2천명의 북한 농민들이 이곳에서 쌀과 옥수수, 감자, 콩 등을 재배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 방문단은 이 단체가 기증한 트랙터로 비료나 수확한 곡식을 운반하는 농사 현장을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 이 단체의 관계자는 트랙터 등 농기계 지원 외에도 북한과 뉴질랜드의 문화교류 사업도 추진해왔다면서 양국 중학교 학생의 그림 전시회를 열어왔다고 소개했음.
 - 평양의 룡복중학교는 2004년부터 뉴질랜드와 북한 간 학생 예술 교류에 참여해온 두 나라 친선을 상징하는 학교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뉴질랜드와 북한이 평양과 서울을 25번 왕복하는 거리인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만큼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뉴질랜드 학생들이 많지 않다면서 예술 교류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 WFP 대북 식량 지원 2개월 연속 감소(10/30, 미국의소리)
 -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이번 달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0만7천여 명에게 1천920t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음.

- 이같은 수치는 지난달(9월) 취약계층 74만 2천여 명에게 2천105t을 지원한 것에 비해 9% 줄어든 규모임.
 -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은 지난 9월에는 전달에 비해 무려 44%가 줄었음.
 -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 여명의 취약계층에 2천587t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도 26% 감소한 규모임.
 - 또 이는 매달 130만여 명의 북한 취약계층에게 1만t의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임.
 -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87개 시, 군에서 식량 지원을 하던 것을 69개 시, 군으로 줄였다고 밝혔음.
 - 또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음.
 -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제한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의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량강도와 함경북도 등 5개 도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6천780만 달러지만 지난 27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천797만 달러임.
- 호주 대북지원 전년보다 17% 감소(10/30, 자유아시아방송)
-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줄였음.
 - 국제개발청의 대변인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북지원금으로 미화로 약230만 달러인 300만 오스트랄리아 달러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 오스트랄리아 정부의 대북지원은 유엔 산하 식량구호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지원에 집중됐음.
 - 오스트랄리아는 지난 4월과 지난해 5월 세계식량계획에 각각 미화 약 230만 달러와 약 280만 달러를 기부해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에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음.
 - 오스트랄리아 국제개발청의 아미타 머탈레이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강행한 2002년부터 호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지원을 중단했으며 이후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머탈레이 대변인은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인 오스트랄리아 정부의 2016 회계연도 대북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서 식량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과 협의를 진행한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 북한동향

-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종료 소식 간략 보도(10.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상봉들에서 우리(北)측 가족·친척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온 데 대하여 이야기 했다고 선전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